

“에너지 대란 해소 빨라도 내년”... 정부, 수급안정 대응 나서

전기·가스 등 수급 불안정 우려
산업부, 민관 합동 TF 구성
매주 에너지 대응방안 점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달부터 오를 전기요금에 가스요금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날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안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4일 오후 서울 무역보협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만나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국내 기름값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9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78원에 경유는 1578원에 판매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전과 발전사 등 에너지 공기업 9곳과 도시가스협회, 대한석유협회,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기업에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대란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의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보면 천연가스의 경우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했으나,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계약 등으로 동북아 현물가격(JKM)이 10월6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56.3달러까지 상승,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다.

가스가격이 급등에 따른 석탄발전가

동과 탈석탄 기조에 따른 투자·생산 위축 등이 맞물리며 석탄 가격은 1톤당 247.5달러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OPEC+의 공급 제한으로 이달 11일 기준 7년만에 최고치인 80.5달러(WTI 기준)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선 안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이런 정부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3.0원 인상되면서 가스요금 인상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해왔으나 한전 적자 누적 등을 버티지 못하고 전기요금을 8년여만에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 상한에 걸려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당 1700원을 찍었다. 서울과 제주 주유소 휘발유값이 가장 비싼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대전까지 1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달 전(9월15일) 1642원보다 358원 인상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6월 1255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한 뒤 지속 증가 추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공동선언

“바이오·AI 등 신산업 투자·인적교류 확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두바이 방문
반도체·백신 등 첨단분야 투자 요청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UAE 두바이를 방문, 타니 알 제유디 대외무역국무장관과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우방이고, 원전 등 에너지분야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밀접히 협력해

왔다”며 “한-UAE CEPA로 현재 수출 37억달러, 수입 57억달러 수준인 양국 간 교역이 더욱 늘어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CEPA로 신산업 분야의 투자 및 인력교류도 활발해지며, 바이오·항공우주·AI이러닝·4차산업혁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소경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서도 양국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산업부 이경식 FTA 교섭관과 UAE 연방경제부 주마 알 카

이트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CEPA 협회에 나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후 두바이 투자청을 방문해 한-UAE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UAE의 대표적 저탄소 녹색 도시인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했다. 여 본부장은 두바이가 ‘청정에너지전략 2050’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적극 투자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얻고, 한국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백신·이차전지와 같은 첨단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방부, 상등병 전역자 특별 진급 추진

만기 전역자 명예 회복

30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지만, 병장 공석수 부족으로 상등병(상병) 전역을 했던 인원들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들에 대한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진급 대상은 71만여 장병이다. 이들을 위해 국방부는 2018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법은 지난 4월13일 제정·공포됐고 이날 시행됐다.

월남전 참전부터 2001년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을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들이 특별진급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안병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지다보니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약 71만의 특별진급 대상자 중 육군은 약 69만2000명, 해군은 약 1만5000명, 공군은 약 3000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판정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코로나 이후 1년 사이 자전거 사고 급증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이후 1년 사이 자전거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 자전거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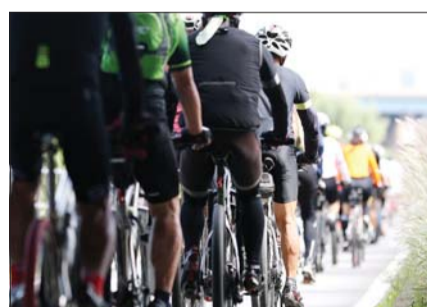
자전거 이용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 선호에 따라 증가 추세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

고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엔 안전사고가 2629건 접수돼 전년(1704건) 대비 54.3%나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계절별로는 9~11월까지 가을철 사고가 가장 많고, 이어 여름(6~8월), 봄(3~5월), 겨울(12~2월) 순이다.

자전거 사고시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스

고,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과속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식량 부족에 허덕여

농식품부 세계 식량안보 보고서

지난해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식량부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여파 등으로 기아 인구는 1년 만에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FAO(세계식량농업기구), WFP(세계식량계획) 등 5개 국제기구가 공동 발간한 ‘2021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영양부족 인구는 8억1000만명(세계 인구 대비 10.4%) 수준으로 2019년(6억5000만명, 8.4%) 대비 약 1억6000만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WFP 기구 내 11위의 식량 공여국이 됐다.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쌀 5만 톤을 4~6개국 식량 위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300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의 단기 식량문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수원국인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4개국 외에 동남아권 최빈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 절반이 기아 상황에 처한 시리아를 신규 추가해 총 6개국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품질이 높은 한국 쌀은 현지에서 만족도가 높다. /세종=한용수 기자